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015. 12. 23(수)	
		보도자료 작성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김영문 / 서기관 김 연 (Tel. 044-200-2249)
23일(수) 17:00(회의종료) 이후 사용 미래부 공동배포			

“우리 헌법도 지식재산 보호를 언급, 인프라 발전시켜야”

-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황 총리 민간위원 20명에 위촉장 수여
- 총리,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달라”
- 첫 회의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발전 3개년 계획’ 등 6개 안건 의결

□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이끌어 갈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2월 23일(수) 공식 출범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 앞서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現 LS그룹 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2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또한 황 총리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과 이를 통한 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 “한-중 간의 지적권 분쟁 급증 등 글로벌 분쟁 대응을 위하여 지적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신임 민간위원들에게는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 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임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세계는 이제 1, 2, 3 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 혁명인 지식재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비롯해 「지적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특허 등 지적권 소송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건 1.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 》

□ 정부는 콘텐츠기업의 인적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확정하였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우수한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이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영화, 게임 등 장르별 문화산업 가치평가 신모형 개발과 관련 산업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콘텐츠기업 대상 가치평가 서비스를 '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1금융권 및 창업투자회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확대를 통해 가치평가 기반 금융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 콘텐츠가치평가에 대해 금융권과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에서는 65.2%가 가치평가 제도 및 시스템을 희망하였고, 콘텐츠기업 74.2%가 가치평가 전담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희망

《 안건 2.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 》

□ 또한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 및 민간 확산 기반 조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은 세계적으로 국제 지재권 분쟁 및 개도국의 위조품 제조·유통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특허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금융위, 지자체 등

- 특히, 정부는 지재권 소송보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16년부터 ① 지재권 소송보험 운영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②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③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인프라 구축, ④ IP 활용 사업연계 및 인식제고 등 4대 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6년 상반기, 과제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이행할 예정

* 관련 부처·기관과 사업연계·협력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

《 안건 3.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

□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분야의 대표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출·수입대체 품종개발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기간 '12~'21, 사업비 4,911억원(정부 3,985, 민간 926), 20개 품목(수출 10, 수입대체 10) 품종개발

* 사업목표 : '21년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 세계 15위권 진입(현 4천만달러, 28위권)

○ 동 프로젝트는 '12년 사전기획을 거쳐 '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간('13~'15) 품종개발 기초 마련*,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143개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4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109억원을 수입대체 하였다.

* 유전자원 7천점 확보 및 계통 1만점 육성, DNA 분자마커 473건, 병리검정기법 개발 등

** 주요 수출대상 21개국 법·제도 및 시장동향 조사, 23개국 123개소 전시포 운영 등

※ 품종개발에 장기간이 소요(5~7년 이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품종개발, 수출, 수입대체 등 구체적인 성과는 2017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에도 계획한 품종의 차질없는 개발,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상품화 기술 개발, 해외 유통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

□ 한편, 지재위는 정책자문 기능 강화 차원에서 산하 5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주도로 기획한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들이 현장경험에 비추어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총 10개의 정책이슈를 2016년도 추진정책으로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6년도 10대 주요 정책이슈 (세부내용 붙임 2 참고) >

정책화 과제	관계부처
1.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개선에 관한 연구	문체부
2.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방안	농식품부, 복지부, 특허청
3. 정부계약법령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	기재부, 특허청
4.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특허청
5.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6.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	기재부, 특허청
7. 의약품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특허청
8.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 방안	특허청
9.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미래부
10.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문화재청

- 향후 관계부처는 제안 과제를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추진 일정을 지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재위에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안전 5.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

- 또한 ‘안전 4’에서 보고한 10개 정책이슈 중 지재위 산하 창출전문 위원회에서 연구·제안한 정책이슈인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도 별도로 보고받았다.

* 전통지식 : 협의 전통지식(식품,의약,공예 등)+유전자원+향토문화자원+문화전승물

-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을 포함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전통지식도 적극적인 보호·활용을 통해 종주권을 확보하고, 침해대비 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 안전을 상정하였다.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자원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통지식을 발굴·기록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된 전통지식 DB를 연계·운영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전통지식 보호·활용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분야별 전통지식 관리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범부처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안건 6.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 》

□ 마지막으로 기존에 수립·추진되었던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받았다.

- 과학계·산업계·경제계 등 창조경제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 지난 11월 12일 국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1심은 기존 58개 지법·지원에서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2심은 기존 23개 고법·지법 합의부에서 특허법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기존에는 특허소송(무효소송·침해소송)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 및 기술 등의 전문적 이해를 요구하는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으나,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심리기간 단축 등 효율성이 제고되어 소송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특허의 시장가치 및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현재 대법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세계 허브코트화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붙임 1 >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붙임 2 >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 본 안건 상세내용은 지재위 홈페이지 <http://www.ipkorea.go.kr> 게재

< 붙임 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연번	사진	성명	학력	주요 경력
1		구자열 (53년생) * 위원장	·서울고 ·고려대 경영학	·現 LS그룹 회장 ·발명진흥회 회장 ·전경련 산업정책위원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사장
2		강인병 (63년생)	·충주고 ·한양대 전자공학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 박사	·現 LG디스플레이 CTO(전무) ·LG디스플레이 연구소장 ·LG디스플레이 TV 개발센터장
3		김창현 (55년생)	·부산고 ·서울대 농교육 ·오하이오 주립대 농경제 석사	·現 한국종자협회 회장 ·(사)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협회 부회장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 ·농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장
4		김호원 (58년생)	·동래고 ·부산대 경제학 ·캘리포니아대 국제대학원 박사	·現 부산대 석좌교수(산학협력단) ·특허청 청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5		문길주 (51년생)	·오타와대 기계학 ·미네소타대 박사	·現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 ·KIST 원장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6		박영일 (58년생)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 ·KAIST 산업경영 박사	·現 이대 디지털미디어부 교수 (대외 부총장) ·과학기술부 차관
7		박현욱 (59년생)	·영등포고 ·서울대 전기공학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現 KAIST 전기전자공학 교수 (교학 부총장)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8		신희섭 (50년생)	·경기고 ·서울대 의과대학 ·코넬의대 유전학 박사	·現 IBS단장(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KIST 뇌과학연구소 소장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9		안미정 (61년생)	·중대부여고 ·연세대 생화학 ·시카고 루시대의대 면역학 박사	·現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 변리사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 변리사 ·특허청 환경화학심사팀장
10		우종균 (63년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美 뉴욕주 변호사 ·국무총리실 자체평가 위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11		이광형 (54년생)	·서울사대부속고 ·서울대 산업공학 ·佛 INSA, 리용제1대학 박사	·現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원장 ·대법원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위원 ·미래준비위원장, 기초연구추진위원장
12		이근 (60년생)	·관악고 ·서울대 경제학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박사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비)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13		이명숙 (63년생)	·대구 신명여고 ·이화여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박사	·現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14		이상정 (50년생)	·전주고 ·서울대 법학 박사	·現 경희대 법학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15		이은정 (64년생)	·서울여고 ·홍익대 경영학	·現 한국맥널티(주) 대표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KOTRA 이사(비)
16		이정훈 (53년생)	·광성고 ·고려대 물리학 ·오클라호마대학교 MBA	·現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장
17		조은경 (54년생)	·숙명여고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現 (주)다손 대표이사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18		최효선 (63년생)	·중경고 ·서울대 불어불문 학/석사	·現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19		한성욱 (60년생)	·동명여고 ·이화여대 화학 학/석/박사	·現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창의재단 이사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단장
20		현창희 (56년생)	·제주 제일고 ·동국대 회계학 ·한남대 경제학 박사	·現 ETRI사업화 본부장 ·(사)한국기업기술기치평가협회 부회장 ·대전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1회]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 <문체부>

(안건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박승준 사무관 044-203-2416)

□ **추진배경**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
 - 콘텐츠 창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수단인 ‘가치평가’ 합리화 선행 필요

□ **추진경과**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보고 및 지시사항* 확정(‘14.4.4.)
 - * 대통령 지시사항 : 가치평가센터와 금융기관의 기술정보 DB가 잘 연동해서 콘텐츠기업이 아이디어와 잠재력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 문체부, ‘가치평가 및 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추진(‘14.12.),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 고시(‘15.1.27.) 및 콘진원*을 ‘가치평가기관 대상기관’으로 지정(‘15.3.3.)
 - * 콘진원(콘텐츠진흥원) 내, 가치평가 TF팀 신설 운용

□ **주요내용**

- 콘텐츠 가치평가 新 모형 개발(‘15)과, 동 모형을 적용한 장르별 세부 평가모형 개발 추진(‘15~’18)(콘진원)
 - ‘경제성 분석’ 시, 종전의 평가항목인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매출액 및 할인률 추정 등 외에, △트렌드, △관련 산업정보(시장규모, 유사 콘텐츠와의 비교우위 정도 등) 및 △불확실(risk)정보 항목을 추가
 - 매년 2개 장르(영화·게임(‘15)→방송·애니메이션(‘16)→캐릭터·음악(‘17))씩 평가모형 개발 추진
- 콘텐츠 창출자 요청시,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콘진원)
- 장르별로 분석·가공한 가치평가 정보를 제1금융권과 창투사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과 콘텐츠 창출자와의 연결을 강화(콘진원)
 - * 가치평가 서비스와 연계한 200억 원 규모 모태펀드(자펀드) 조성·운영(‘16년 하반기)

□ **향후계획**

- (‘16, 상반기) ‘콘텐츠 가치평가센터(가칭)’ 개소 및 시범서비스* 실시
 - * 한국수출입은행 및 창업투자사 등과 연계,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 서비스 예정

[2호]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 <특허청>

(안건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문은정 사무관 042-481-5992)

□ 추진배경

- (배경) 국제 지재권 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IP소송 보험 상품 다양화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분쟁 대응력 제고 필요

* '10년 이후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은 1,500여건으로 증가추세, 최근 중국·홍콩産 위조 상품이 전세계 유통·확산(미국 세관 모조품 압류건수의 88% 차지, '14년 美세관 통계)

- (현황·문제점) 가입 기업 수 협소, 상품 다양성 부족*, 통합 DB·시스템·전담 인력 등 지원 인프라 미비로 소송보험의 민간 확산기반이 미흡

* 보험료(6년간 평균보험료 15백만원) 부담으로 가입유인이 부족한 문제 등(연평균 66社 지원)

□ 개선방향 및 주요내용

- (방향) IP 소송보험 민간 확산을 지향하되, 초기단계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유럽·미국은 민간주도 IP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중국·일본 등은 정부지원 운영

- (주요과제) 가입지원 확대, 상품 다양화 등 부처·기관간 연계 및 협력 추진

① 소송보험 운영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특허청, 중기청, 지자체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무역보험공사, 기업단체(무역협회·중기중앙회·외식산업협회 등)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18년 이후 1천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보험 가입 유지

※ 지원목표 : '16) 300~500社 → '17) 500~700社 → '18) 700~1,000社

②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미래부, 농식품부, 특허청, 지자체 등)

* 中 진출 중소기업 전용 단체상품 개선·확대('16~), 업종별 단체상품 개발·지원('17) 및 보험 가입자 요구에 따라 보험설계가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설계상품 운영('18)

③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인프라 구축 (특허청, 지자체, 기업단체, 보험사 등)

* 전담인력 구성('16.상), 보험 통계·사례 구축 및 공유('17), 소송보험 종합포털 운영 등('18)

④ IP 활용 사업연계 및 인식제고 (금융위,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지자체 등)

* IP금융(산은 등 담보대출 우대혜택), 수출기업 지원사업(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중기청 차이나 하이웨이) 연계('16), 소송보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17)

□ 향후계획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수립 및 유관 기관·부처 후속 지원 연계('16.상)

- '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16.6월)

[3회]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농식품부>

(안건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하성태 사무관 044-201-2481)

□ 추진배경 및 경과

-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新지식재산 산업
 - 세계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성장('02:247억 달러→'12:449억\$)
 - 한국은 수출이 증가('02:25백만 달러→'14:40백만달러)하고, 해외 지불 로열티는 감소('02:153억원→'14:136억원)하는 추세이나 세계시장의 1.1%(4억 달러)에서 정체*
 - * 영세한 기업구조, R&D 투자 미흡, 산업기반 미흡 등이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중심의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략적 종자개발 R&D인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 5개 사업단 및 225개 세부프로젝트 구성, 연구 착수('13.7.)
 - * 4개 부처 참여, 기간 '12~'21, 20개 품목(수출 10, 수입대체 10) 품종개발, 사업비 4,911억원(정부 3,985, 민간 926)

□ 추진실적

- (해외 기반구축) 주요 수출대상국(21개 국가*) 법·제도 및 시장정보 조사, 육종기지 설치(7개국), 시험·전시포 운영(23개국 123개소) 등
 - * 주요국가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이집트, 스페인 등
- (기초연구 및 지재권 강화) 유전자원 수집(7천점), 계통 육성(1만점),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정('13.8.13), 싱가포르 특허청과 MOU 체결('15.7)
 - ⇒ 세계 7위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 (품종개발 성과) 현재까지('13.7.~'15.11.) 143개 품종(수출전략형 85개, 수입대체형 58개)을 개발, 14백만 달러 수출 및 109억원 수입대체
 - * 종자 수출기업의 56%가 GSP사업 참여 이후('13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

□ 향후 계획

- 1단계 연구를 기반으로 목표 품종 개발 및 성과 가시화에 주력
 - * 연구 1단계('12~'17)는 기반·기초연구, 2단계('17~'21)는 품종개발 및 수출 등 성과 가시화
- 수출수입대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제 중심으로 연구체계 개편
 - * 품목별로 수출액 및 국내매출액 등 질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 강화
- 개발된 품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유통역량 강화 등
 - * 종자 생산(채종), 가공처리 등 상품화 기술 개발, 참여기업 해외법인 설치 확대 유도
-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촌진흥청 등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4호]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승기 사무관 02-2110-2185)

□ 추진배경

- 정책자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주도로 지식재산관련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권고(‘14년부터 실시)
- 관계부처는 정책화 추진과정에서 대안제시 가능

□ 주요내용 :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에서 발굴(‘15.9)한 정책이슈 중 각 2개씩 선정

①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개선에 관한 연구(문체부)

- 디지털 저작물에 한정(‘디지털저작권거래소’)되고 산업발전보다는 보호에 치중한 유통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및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②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방안(농식품부 등)

- WIPO의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논의에 대응하여, 선행기술의 근거(PCT 최소문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통지식’에 대한 ‘DB구축’필요
- ⇒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통합관리기구 운영 등 범정부 정책 추진 필요

③ 정부계약법령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기재부 등)

- 현재 정부계약법령상에 관련 조항 미비로, 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장 불투명
- ⇒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마련 등 보호·활용 인식제고 필요

④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특허청)

- 발명 관련법 일부 조항의 사용자 부담 가중 및 이중양도 위험성 등 부작용 상존(승계여부 ‘문서’ 통지 의무, 미통지시 포기 간주)
- ⇒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승계시점 전환(사용자 통지시 → 종업원 신고시) 등 직무발명관련제도 개선 필요

⑤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복지부 등)

- 보건의료 R&D의 사업화를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중이며, IP 창출·활용 예산도 부족(복지부 R&D예산 4,600억원, 기술사업화 예산 20억원에 불과)

⇒ 범부처 통합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Bio Korea 등 국제기술 거래시장 조성 등 필요

⑥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기재부 등)

○ 현재는 IP 활용단계보다 기업의 R&D투자단계에 조세지원 집중

⇒ 일반 개인의 IP 활용 수익에 대한 조세감면, IP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조세지원 필요

⑦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특허청)

○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하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그동안 특허청에서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EU 등과 같이 보호 판결(15.5)

⇒ 용도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필요

⑧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방안(특허청)

⇒ 체계적인 IP 교육을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반영 및 교육모델 개발·운영 필요

⑨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D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미래부)

○ 국가 R&D 추진방향을 IP 기반의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성화로 전환해야 하나, 특허 및 기술료 산출 중심의 IP관련 성과지표로는 한계 내재

⇒ R&D 전 과정에서의 IP자원 활용, 직접적인 성과물(output)과 간접적인 파급효과(Impact)까지 망라하는 성과관리 모델로 전환 필요

⑩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문화재청)

○ WIPO의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보호 논의에 대응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IP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을 계기로 자료구축 등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로드맵 필요

□ **향후계획**

○ '15.12~'16.1월 : 관계부처 통보 및 정책화 추진계획 접수

○ '16.3~4월 : 제16차 본회의에 관계부처 추진계획 보고

[5회]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지재위>

(안전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향수 사무관 02-2110-2195)

□ 추진배경

- 전통지식*의 상업적 활용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 심화
 - * 전통지식 : 협의 전통지식(식품,의약,공예 등)+유전자원+향토문화자원+문화전승물
- WIPO에서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를 진행 중이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지속
 - ※ 선진국 : 전통지식문헌의 PCT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화 등 방어적 보호 강조
 - ※ 개도국 : 특허출원시 전통지식 출처표시, 독자적인 법체계 마련 등 적극적 보호 주장
- 국제적으로 치열한 전통지식자원 보호·활용 경쟁에 대응, 중주권 확보* 및 침해대비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지식 활용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융복합 전통지식의 체계적 연구 및 과학적 재조명 필요
 - * 중국은 전통 약초서적 연구로 개똥쑥에서 말리리아 치료제를 추출,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적으로 식약동원, 食治 등 독창적 융합 사상·지식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산업으로의 가치창출에 대한 인식 부족
 - * 조선시대 ‘의방유취’는 국내보다 중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연구사업 수행 중
-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전통지식의 발굴·관리가 미흡하고, 식품 및 한의학 등 부처단위 개별 DB로 산재
 - * 한국전통지식포털(특허청)도 심사목적에 국한, 산업적 활용엔 미흡

□ 정책제언

-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통지식 발굴·기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부처별·기관별 산재된 DB를 연계·운영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전체적인 통일된 분류 코드화 등
- 전통지식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부처/지자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산업적 활용촉진을 위한 범부처 공동 정책연구, 전통지식 보호·활용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분야별 전통지식 관리 거점기관 지정 등

[6회]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안 추진결과 <지재위>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김진희 전문관 02-2110-2192)

□ 추진배경

- 그간 이원화된 특허소송 체계*로 인해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는 특허법원, 침해여부(침해소송)는 일반법원 관할

-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등은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을 지속 요구한 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소송 관할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지재권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13.9, 총 16차)
 - 지재권소송 관할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안) 마련('13.9)
- 제9차 지재위,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안)' 의결('13.11)
- 제12차 지재위,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개선 추진현황' 보고('14.12.)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발의('14.9 이상민의원/'15.2 정갑윤의원)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15.10.20) 및 전체회의 통과('15.10.28)
- 국회, 본회의 통과('15.11.12, '16.1.1. 시행)

□ 주요내용

- (1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1심은 각 고법소재지 5개 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 인정(민소법 제24조(지재권 특별재판적) 개정)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 (2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개정)
 - * (1심) '지법·지원(58개원)→ 고법소재지 지법(5개원)', (2심) '고법 지법 합의부(23개원)→특허법원'

□ 향후계획

- 관할집중 추진결과자료집 발간(~12월) 및 주요 기관* 배포
 - * 지재위(특위위원·민간위원·전문위원), 국회(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대법원(IP 허브코트추진위원회), 관계부처(특허청·문체부·산업부 등), 공공기관 등 배포

붙임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주요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09.7.29)에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수립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11.5.19) 및 동법을 근거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와 사무기구(지식재산 전략기획단) 설치('11.7.28)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부처 변경(총리실→미래부)('13.3.23)

□ 위원회 개요

- (구성)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20명
 - * 정부위원 : 국무총리, 미래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 민간위원 :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 (기능)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점검·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자원배분방향 및 운용 심의·조정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심의 등
- (산하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안전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 * (전문위원회)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5개)
 - ** (특별전문위원회) 긴급·중요 현안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 *** (실무운영위)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